

# 저소득 고용의 소득지위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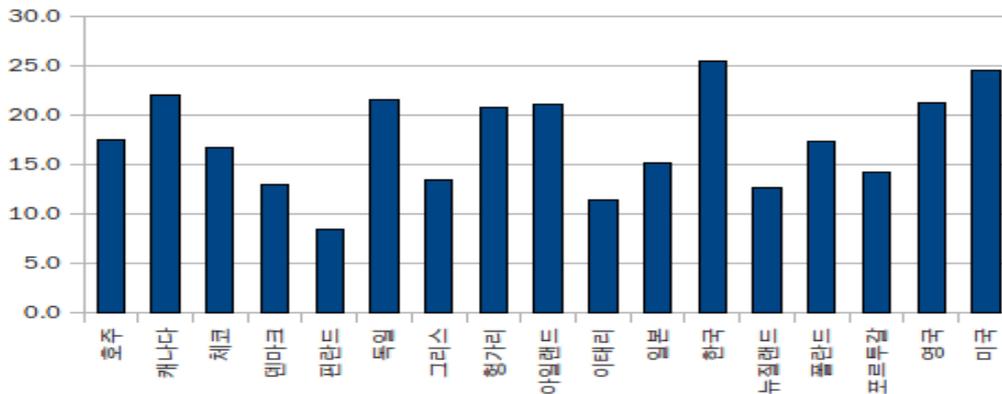
성재민\*\*

## I. 머리말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볼 때 저임금 고용비중이 높은 나라이다. 2008년 을 기준으로 저임금 비중 통계가 이용가능한 OECD국가들 중 우리나라의 저임금 고용비 중이 25.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으로부터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의 실태 그 자체보다 는 낮은 소득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후 어떤 소득지위 이동을 경험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II장에서는 분석에 이용한 데이터의 소개 및 저소득자의 특성을

[그림 1] 국가별 저임금 고용 비중



자료: OECD(2010), *OECD Employment Outlook*.

\* 이 글은 본원의 수시과제인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경로 및 결정요인 분석」 중 제2장을 재 정리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eongjm@kli.re.kr).

분석하였고, 제Ⅲ장에서는 저소득자의 연도별 소득지위, 경제활동상태 지위이동을 분석하였으며, 제Ⅳ장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어떤 요인들이 저소득 지위의 탈출에서 중요했는지 분석하였다.

## II. 저소득자의 특성

본 연구의 강조점은 동일한 사람들의 다년간에 걸친 노동시장에서의 이동에 있으므로, 분석을 위해서는 동일 개인을 여러 해 추적하는 패널조사를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이하 KLIPS) 자료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KLIPS에서 이용가능한 근로소득 변수는 2가지가 있다. 조사시점 현재 가지고 있는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자영업자라면 월평균 소득)과 조사시점 전년도에 번 연간근로소득 변수가 그것이다. 월평균 임금의 경우 조사 당시 가지고 있던 일자리 중 가장 중요한 일자리에서 받는 임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복수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하나의 일자리로부터 받는 임금만 고려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 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일자리에서 얻는 임금소득이 아니라 그가 1년 동안 번 근로소득 총액이다. 대학강사, 건설인부처럼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거나 여러 일자리를 동시에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때 그 중 하나의 일자리로부터 올린 소득만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해당자의 저임금 특성을 연구할 때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1년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은 생활이 가능한 근로소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므로 타당성이 있다. 이를테면 Andersson et al(2005)는 저임금 탈출을 연구할 때 분기소득과 연간소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분석의 단점은 여가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아 때때로 일하지만, 일한 기간의 소득은 저소득이 아닌 사람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1년간 벌어들인 근로소득 총합을 대상으로 할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도 포함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상당한 규모로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자영업에서 임금근로로 이동이 발생하고 있다.<sup>1)</sup> 그리고 일부는 자영업 일자리와 임금근로 일자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저임금→저임금으로의 이동에만 분석시야를 좁히는 것은 오히려 현실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움직임을 왜곡해 보여줄 가능성이 존재한다.

1) KLIPS를 분석해 보면 2004년에 상용직이었던 사람 중 2005년에는 4.4%가 자영/고용주로 이동했고, 2006년에는 5.7%, 2007년 7.1%, 2008년 8.8%가 자영/고용주로 이동했다. 2004년 임시직이었던 사람 중에는 2005년 7.2%, 2006년 5.7%, 2007년 8.0%, 2008년 11.9%가 자영/고용주로 이동했다.

〈표 1〉 세전 연간근로소득 기준 근로소득 지위별 분포

(단위: %)

		2002년 (6차년도)	2003년 (7차년도)	2004년 (8차년도)	2005년 (9차년도)	2006년 (10차년도)	2007년 (11차년도)
저소득	빈곤	20.9	19.5	20.0	22.4	19.0	18.8
	빈곤 ~ 저소득 미만	11.3	10.7	10.9	8.0	12.9	12.7
비저소득	저 ~ 중위소득 미만	17.7	19.2	18.4	19.0	17.5	17.8
	중위 ~ 고소득 미만	19.5	18.5	23.6	23.8	21.0	20.1
	고소득	30.6	32.1	27.1	26.9	29.6	30.6

따라서 이 장에서는 자영업과 임금근로자를 모두 포괄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KLIPS의 연간근로소득은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이 모두 6차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하였다. 데이터의 이용가능성 때문에 본 분석의 대상기간은 6차년도부터 자료가 공식적으로 이용가능한 마지막 시점인 11차년도 조사까지로 하였다. <표 1>은 세전 연간근로소득을 대상으로 근로소득 지위별 분포를 요약하고 있다. 근로소득 지위별로 5개 범주를 구별해 놓았는데, 빈곤층은 중위소득 기준 50% 미만의 소득을 버는 자를 의미하고, 저소득(임금)이란 중위소득(임금) 기준 2/3 소득이며, 고소득(임금)은 중위소득(임금) 기준 3/2 소득이다.)

<표 1>에 따르면 빈곤층은 대략 20%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고, 빈곤 ~ 저소득 미만에 속하는 층은 11% 남짓으로 나타났다. 이 두 수치를 합하면 총 저소득자 비중은 6차년도 32.2%, 11차년도에는 31.5%로 계산된다. 증가 또는 감소의 트렌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비저소득자는 6차년도 67.8%, 11차년도에는 68.5%였다. 중위소득 기준 3/2 이상 버는 고임금층은 대략 30% 남짓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는 특성별로 KLIPS에서 나타난 근로소득 지위 비중을 보고하고 있다. 이하의 분석에서 시작시점으로 이용될 6차년도 조사 기준 남자는 저소득층에 20.9%만이 있었던 반면, 여자는 51.1%가 있었다.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무학의 83.8%가 저소득층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고졸 미만은 47.1%, 고졸은 28.2%, 전문대졸은 24.4%, 대졸 이상은 14.7%가 저소득층에 있었다.

혼인상태로 보면 이혼/사별은 절반이 넘는 59.4%가 저소득층에 있었고, 기혼 유배우는 26.9%만이 저소득층에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은 절반이 넘는 68.7%가 저소득층에 있었고, 29세 이하 집단도 43.9%가 저소득층에 있었다. 30대와 40대는 25% 미만만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농림어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

2) 이는 OECD 보고서에서 흔히 활용되는 상대빈곤, 상대 고소득 기준이다.

<표 2> 특성별 근로소득 지위 비중

(단위: %)

		저소득	비저소득	전 체
성	남성	20.9	79.1	100.0
	여성	51.1	48.9	100.0
학력	무학	83.8	16.2	100.0
	고졸 미만	47.1	52.9	100.0
	고졸	28.2	71.8	100.0
	전문대재/대재학	57.8	42.2	100.0
	전문대졸	24.4	75.6	100.0
	대졸 이상	14.7	85.3	100.0
혼인	미혼	39.8	60.2	100.0
	기혼 유배우	26.9	73.1	100.0
	이혼/사별	59.4	40.6	100.0
연령	29세 이하	43.9	56.1	100.0
	30 ~ 39세	20.8	79.2	100.0
	40 ~ 49세	24.7	75.3	100.0
	50 ~ 59세	30.3	69.7	100.0
	60세 이상	68.7	31.3	100.0
산업	농림어업	59.8	40.2	100.0
	광공업/전기	24.7	75.3	100.0
	건설업	20.7	79.3	100.0
	도소매	31.4	68.6	100.0
	운수업	15.1	84.9	100.0
	통신업	20.6	79.5	100.0
	금융보험업	19.7	80.3	100.0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	33.1	66.9	100.0
	공공 및 교육	21.0	79.0	100.0
	보건사회 복지	26.9	73.1	100.0
	오락방송 및 공연	15.8	84.2	100.0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	42.2	57.8	100.0
	직업	고위/(준)전문가	17.3	82.7
사무직원		21.1	79.0	100.0
서비스/판매종사자		33.0	67.0	100.0
농어업숙련근로자		59.9	40.1	100.0
기능원		21.8	78.2	100.0
조직원		23.2	76.8	100.0
단순노무직		58.1	41.9	100.0
사업체 규모	10인 미만	28.5	71.6	100.0
	10 ~ 29인	31.4	68.6	100.0
	30 ~ 99인	24.0	76.0	100.0
	100 ~ 299인	29.8	70.2	100.0
	300인 이상	22.6	77.4	100.0
고용형태	정규직	23.4	76.6	100.0
	비정규직	45.7	54.3	100.0

주: 연구의 분석 시작시기인 6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업에서 저소득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운수업, 오락방송 및 공연사업, 금융보험업 등에서 저소득자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직과 농업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에서 저소득자 비중이 높았고, 고위임직원, 전문가, 준전문가 집단에서 저소득자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사무직과 기능원은 약 21%대로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10~29인에서 저소득자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100~299인이었으며, 300인 이상 사업체는 가장 저소득자 비중이 낮았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의 거의 절반(45.7%)이 저소득자인 것을 알 수 있다.

### III. 근로소득 지위별 이동

이 장에서는 연도간 근로소득 지위별 이동을 이행행렬을 통해 분석한다. 근로소득 지위만이 아니라 실업 및 비경활을 모두 포함해서 어떤 식의 이동패턴이 나타나는지 확인할 것이다. 소득에 따라 실업이나 비경활을 경험할 가능성이 다르다면 이를 감안했을 때 이동확률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표 3>을 보면 2002→2003년간 저소득층의 57%가 저소득층인 채로 남았다. 실업과 비경활로의 이동이 각각 2.7%, 7.4%로 약 10% 정도가 실업, 비경활로 이동함을 알 수 있다. 저소득 이상 중위소득 미만자의 경우 상위소득 지위로 이동한 사람이 저소득 지위로 떨어진 사람보다 비율상 많았지만, 약 9% 정도의 사람들이 실업 및 비경활로 이동해 저소득+실업+비경활로의 이동을 합치면 상위소득 지위로 이동한 사람과 거의 비슷한 수치가 되었다. 고소득자의 경우 다른 소득자들에 비해 이동이 많지 않고 머무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일단 고소득층에 진입하게 되면 다른 소득지위에 비해 하향이동의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는 셈이다.

6차년도 조사에서 실업 및 비경활이었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을 경우 절대 다수가 저소득 일자리에서 일하게 됨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비경활이었다가 저소득 일자리를 얻은 사람이 전체의 8.2%인데, 근로소득을 얻은 사람 중에서는 약 84%( $=8.2/(8.2+0.8+0.5+0.3)$ )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실업 또는 비경활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소득층은 실업과 비경활로의 이동이 절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소득지위-경제활동상태 이동을 보면 저소득자로 어떤 사람들이 유입되는 지를 알 수 있다.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7차년도 저소득자 중 63.2%는 6차년도 저소득자가 그대로 저소득자인 채로 남아 유입된 것이며, 14.2%는 비경활로부터 유입되었고,

<표 3> 세전 연간근로소득 기준 연도간 소득 및 경제활동상태 이동

(단위: %)

		저소득	저~중위 소득	중위~ 고소득	고소득	실업	비경활	전체
		2003년(7차년도 조사)						
2002년 (6차년도)	저소득	57.0	21.3	7.7	4.0	2.7	7.4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17.1	47.7	20.3	6.0	3.9	5.0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4.5	16.5	48.9	25.0	1.5	3.6	100.0
	고소득	1.0	3.5	10.0	82.8	0.9	1.8	100.0
	실업	26.7	6.2	3.6	0.0	25.4	38.1	100.0
	비경활	8.2	0.8	0.5	0.3	4.5	85.7	100.0
		2004년(8차년도 조사)						
2003년 (7차년도)	저소득	58.1	21.5	9.1	2.0	3.3	6.0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21.1	43.2	23.3	4.5	2.2	5.9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4.5	14.3	57.8	17.3	2.4	3.6	100.0
	고소득	1.4	3.6	18.4	74.0	1.1	1.4	100.0
	실업	39.7	3.2	1.0	0.0	25.1	31.1	100.0
	비경활	8.9	0.8	0.7	0.3	4.1	85.2	100.0
		2005년(9차년도 조사)						
2004년 (8차년도)	저소득	53.9	20.9	9.5	2.4	3.7	9.6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15.9	45.9	26.2	3.8	2.9	5.3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2.6	14.3	58.1	20.3	1.8	2.9	100.0
	고소득	1.2	1.1	12.5	82.9	0.8	1.7	100.0
	실업	50.6	3.9	0.0	0.6	19.4	25.5	100.0
	비경활	11.2	1.1	0.6	0.1	3.3	83.7	100.0
		2006년(10차년도 조사)						
2005년 (9차년도)	저소득	61.1	15.8	8.0	3.3	2.8	9.0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25.4	40.8	20.3	4.4	2.1	7.1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5.0	15.7	51.1	22.5	1.6	4.1	100.0
	고소득	1.3	2.1	9.7	85.0	0.8	1.2	100.0
	실업	31.8	7.6	2.9	0.0	21.0	36.8	100.0
	비경활	6.7	0.9	0.2	0.0	3.0	89.1	100.0
		2007년(11차년도 조사)						
2006년 (10차년도)	저소득	61.6	17.0	8.4	2.5	1.2	9.3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16.6	48.7	22.6	5.5	1.7	5.0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4.3	14.0	54.0	22.7	1.4	3.7	100.0
	고소득	0.7	1.9	9.3	85.1	0.6	2.3	100.0
	실업	41.2	7.5	5.4	0.0	15.1	30.8	100.0
	비경활	8.3	0.5	0.4	0.1	2.6	88.2	100.0

12.6%는 저소득 이상 중위소득 미만 층으로부터 유입되었다. 4.6%는 실업자로부터, 나머지 약 5% 정도는 중위소득 이상층으로부터 유입되었다. 반면 7차년도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6차년도 고소득자가 그대로 고소득자인 채로 남은 경우가 80%, 중위소득 이상 고소득 미만 층으로부터의 유입은 14.3%였으며, 나머지로 부터는 겨우 5.7%만이 유입되었다. 실업으로부터의 유입은 아예 없었고, 비경활로부터의 유입은 0.4%로 나타났다.

<표 4> 세전 연간근로소득 기준 격년간 소득 및 경제활동상태 이동

(단위: %)

		저소득	저~중위 소득	중위~ 고소득	고소득	실업	비경활	전체
		2004년(8차년도 조사)						
2002년 (6차년도)	저소득	51.1	20.2	12.8	2.6	3.5	10.0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21.5	39.4	23.5	6.4	3.2	6.1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8.0	14.7	50.0	21.2	1.9	4.2	100.0
	고소득	2.0	3.5	18.2	72.5	1.5	2.3	100.0
	실업	27.5	16.6	13.9	6.4	20.9	14.7	100.0
	비경활	16.2	4.6	5.8	1.7	4.8	66.9	100.0
		2005년(9차년도 조사)						
2003년 (7차년도)	저소득	51.5	20.2	11.4	2.2	3.6	11.1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20.8	37.9	26.1	5.4	2.4	7.4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6.2	14.1	51.5	20.9	3.0	4.3	100.0
	고소득	2.2	3.5	16.6	73.8	0.9	3.1	100.0
	실업	24.8	24.8	15.8	4.5	6.6	23.5	100.0
	비경활	15.5	7.5	5.1	2.2	3.9	65.9	100.0
		2006년(10차년도 조사)						
2004년 (8차년도)	저소득	53.0	16.6	9.8	2.8	2.6	15.3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26.6	32.6	21.9	6.1	2.6	10.4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5.3	15.2	43.3	28.1	2.1	6.0	100.0
	고소득	1.3	3.1	10.5	81.4	1.1	2.6	100.0
	실업	36.2	12.4	12.3	4.7	16.8	17.5	100.0
	비경활	13.1	6.6	4.1	2.6	3.3	70.4	100.0
		2007년(11차년도 조사)						
2005년 (9차년도)	저소득	53.4	17.5	9.3	4.4	1.2	14.3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26.4	33.6	20.1	7.1	2.8	10.1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7.5	15.0	42.5	27.3	1.5	6.3	100.0
	고소득	1.5	1.7	10.0	83.2	0.8	2.9	100.0
	실업	25.9	18.5	14.6	8.1	7.0	26.0	100.0
	비경활	11.0	5.0	3.2	1.3	2.1	77.5	100.0

이를 보면 대체로 저소득자는 저소득에서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나머지가 실업 또는 비경활층, 바로 위의 소득계층으로부터 유입되는 방식으로 재생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고소득자는 압도적으로 자체 재생산되며 일부가 바로 아래 소득계층에서 유입된다.

이상의 특징은 다른 연도간 이동을 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실업으로부터의 이동의 경우 수치가 좀 안정적이지 않은 편인데, 이는 실업자 표본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표 4>는 격년간 이동을 분석하고 있다. <표 3>과 비교해 보면, 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저소득→저소득 이동은 5%포인트 이상 줄어든 반면, 고소득→고소득 이동은 2%포인트 안팎의 변화가 있을 뿐이다.<sup>3)</sup> 저소득자의 상향이동은 격년을 볼 경우 늘어나고,

<표 5> 세전 연간근로소득 기준 3년간 소득 및 경제활동상태 이동

(단위: %)

		저소득	저~중위 소득	중위~ 고소득	고소득	실업	비경활	전체
2005년(9차년도 조사)								
2002년 (6차년도)	저소득	43.4	21.7	12.6	4.3	4.4	13.6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20.9	34.8	27.6	7.0	1.5	8.2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7.4	13.8	46.1	24.3	2.7	5.8	100.0
	고소득	2.9	3.6	17.1	71.8	1.1	3.5	100.0
	실업	30.8	17.6	18.9	10.3	6.1	16.3	100.0
	비경활	19.6	11.5	10.4	3.6	4.0	51.0	100.0
2006년(10차년도 조사)								
2003년 (7차년도)	저소득	52.6	15.5	10.1	3.0	3.2	15.6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24.6	28.7	24.1	8.7	2.4	11.6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7.8	16.1	39.3	27.3	3.5	6.0	100.0
	고소득	3.3	4.1	12.5	75.0	1.1	4.1	100.0
	실업	37.9	12.3	20.7	6.3	3.5	19.4	100.0
	비경활	17.0	10.8	9.5	3.6	3.1	56.1	100.0
2007년(11차년도 조사)								
2004년 (8차년도)	저소득	50.0	16.9	9.4	4.2	2.0	17.5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23.8	29.0	23.7	7.8	2.7	13.1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8.5	14.3	36.6	33.2	1.4	5.9	100.0
	고소득	1.9	2.2	10.5	80.3	0.5	4.6	100.0
	실업	30.9	23.6	16.6	7.9	5.0	16.0	100.0
	비경활	15.1	9.7	7.1	4.5	2.2	61.4	100.0

3) 비교대상 시점은 탈출년도이다.

고소득자의 하향이동은 그리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저소득일수록 실업/비경활로 많이 이동하는 것은 연간 이동이나 큰 차이가 없지만, 비경활로의 이동률이 연간을 분석할 때보다 격년을 분석할 때 대략 5%포인트 안팎으로 더 늘었다는 것은 차이로 지적할 수 있다. 격년으로 분석하면 다른 소득 지위에서도 대체로 다른 소득지위로의 이동이 늘어난다. 저소득 이상 중위소득 미만층은 하향이동과 실업/비경활로의 이동이 상향이동보다 다소 크게 늘어났다. 반대로 중위소득 이상 고소득 미만층은 상향이동 비중이 하향 또는 실업/비경활보다 다소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고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계층에서 하향이동+실업/비경활 비중이 상향이동 비중보다 높은 것은 연도간으로 보나 격년 간으로 보나 변하지 않는다.

<표 5>는 3개년간 이동을 분석하고 있다.4) <표 4>와 비교해 보면, 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저소득→저소득 이동, 고소득→고소득 이동 모두 소폭 줄었다. 저소득자의 소득지위 이동을 보면 상향이동은 격년을 볼 때와 눈에 띄는 차이는 관찰되지 않으며, 비경활로의 이동은 소폭 증가한 것이 관찰된다. 3년간 이동에서도 격년 이동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다른 소득지위로의 이동이 늘어난다.

<표 6> 세전 연간근로소득 기준 4년간 소득 및 경제활동상태 이동

(단위: %)

		저소득	저~중위 소득	중위~ 고소득	고소득	실업	비경활	전체
2006년(10차년도 조사)								
2002년 (6차년도)	저소득	48.2	15.8	10.3	5.9	2.9	16.9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26.0	27.7	24.8	8.0	2.6	11.0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8.8	13.7	39.9	28.1	3.0	6.5	100.0
	고소득	3.8	5.6	12.4	73.4	1.2	3.7	100.0
	실업	29.0	16.7	17.3	7.8	10.7	18.5	100.0
	비경활	21.4	11.6	13.4	6.5	3.3	43.9	100.0
2007년(11차년도 조사)								
2003년 (7차년도)	저소득	49.3	14.9	9.4	5.0	2.7	18.8	100.0
	저소득~중위소득 미만	21.4	25.7	24.6	12.8	2.3	13.2	100.0
	중위소득~고소득 미만	11.0	16.1	35.3	30.4	1.4	5.9	100.0
	고소득	4.1	4.3	12.2	73.5	0.6	5.4	100.0
	실업	28.5	14.3	21.7	11.4	6.0	18.0	100.0
	비경활	21.0	14.1	11.9	6.2	2.0	44.8	100.0

4) <표 5>의 저소득→저소득 이동은 3년간 계속 저소득이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작시점과 끝시점에 저소득이었다는 의미로 중간에 어떤 소득지위나 경활상태로 이동했는지는 고려되지 않았다.

<표 6>은 4개년간 이동을 분석하고 있다.<sup>5)</sup> <표 5>와 비교해 보면, 역시 같은 소득계층에 머무르는 비중은 다소 감소했고, 다른 소득지위나 실업/비경활로의 이동은 다소 늘었다.

<표 7>은 5개년간 이동을 분석하고 있다.<sup>6)</sup> <표 6>과 비교해 보면, 역시 같은 소득계층에 머무르는 비중은 다소 감소했고, 다른 소득지위나 실업/비경활로의 이동은 다소 늘었다.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면 11차년도 저소득층은 41.4%가 6차년도에도 저소득층이었던 사람들이며, 30.4%가 6차년도에 실업 또는 비경활상태였던 사람들이고, 13.9%가 저소득 이상 중위소득 미만층으로부터 유입된 사람들이다. 나머지 14% 정도가 중위소득 이상, 고소득층으로부터 유입된 사람들이다. 이를 보면 시간 간격을 멀리 해서 보더라도 저소득층은 저소득을 경험했던 사람, 실업이나 비경활을 탈출한 사람들로 대부분(71.8%)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 다수인 66%가 기준에도 고소득층이었던 사람, 16.4%가 중위소득 이상 고소득 미만이었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의 경제활동상태나 소득지위를 경험한 사람들로부터의 이동은 5년의 시간 간격을 두더라도 약 17% 남짓에 머물렀다.

이 장을 마무리 하기에 앞서 소득지위 이동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실업과 비경활 경험을 거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실제 일하는 날짜수가 소득지위별로 어떻게 다른지 <표 8>에서 계산해 보았다. 가끔씩만 노동시장에 참가하여 소득을 올린 사람들은 제외하고 계산하기 위해 한해도 빠짐없이 노동시장에 참가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연간 근로소득(세전)을 기준으로 소득지위별 연간 평균근로일수를 계산하였다. 이를 보아도

<표 7> 세전 연간근로소득 기준 5년간 소득 및 경제활동상태 이동

(단위: %)

		저소득	저~중위 소득	중위~ 고소득	고소득	실업	비경활	전체
		2007년(11차년도 조사)						
2002년 (6차년도)	저소득	46.6	14.9	10.1	7.3	2.3	18.8	100.0
	저소득 ~ 중위소득 미만	23.4	27.1	23.4	9.9	0.8	15.3	100.0
	중위소득 ~ 고소득 미만	11.5	13.9	34.6	31.2	1.8	7.1	100.0
	고소득	4.4	4.9	11.6	73.6	0.9	4.7	100.0
	실업	33.6	15.8	22.0	12.8	2.3	13.5	100.0
	비경활	22.4	16.0	14.3	9.5	2.2	35.7	100.0

5) <표 6>의 저소득→저소득 이동은 4년간 계속 저소득이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작시점과 끝시점에 저소득이었다는 의미로 중간에 어떤 소득지위나 경활상태로 이동했는지는 고려되지 않았다.

6) <표 7>의 저소득→저소득 이동은 5년간 계속 저소득이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작시점과 끝시점에 저소득이었다는 의미로 중간에 어떤 소득지위나 경활상태로 이동했는지는 고려되지 않았다.

〈표 8〉 연간근로소득에 따른 소득 지위별 연간 평균근로일수

(단위 : 일)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빈곤	272 (108.2)	268 (113.6)	264 (113.4)	248 (121.9)	270 (110.7)	256 (116.5)
빈곤 이상 ~ 저소득	332 (61.6)	330 (64.2)	339 (53.5)	330 (61.6)	340 (50.9)	337 (59.1)
저소득 이상 ~ 중위소득	343 (53.3)	345 (48.9)	347 (44.8)	346 (42.2)	345 (49.2)	345 (49.0)
중위소득 이상 ~ 고소득	353 (37.5)	354 (35.7)	354 (36.2)	356 (31.6)	357 (28.3)	357 (28.8)
고소득	360 (26.4)	360 (23.8)	361 (19.5)	363 (15.5)	363 (16.2)	363 (13.5)
전 체	335 (69.3)	335 (70.1)	336 (69.9)	330 (78.8)	338 (66.5)	336 (71.3)

주: 괄호는 표준편차.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토요일, 일요일도 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산.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일한 날짜수도 적어 실업과 비경황을 반복하는 것이 낮은 소득지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앞서의 분석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 IV. 저소득 탈출분석

지금까지는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지위 이동을 분석하였다. 이하에서는 저소득으로 분류된 사람 중 11차년도에 저소득을 탈출할 확률에 개인의 어떤 특성들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겠다.

분석을 위해 종속변수는 7차년도(2003년)에는 저소득자였으나 11차년도(2007년)에는 비저소득자가 된 경우 1, 여전히 저소득자인 경우 0인 이항변수로 설정하였다. 7차년도부터 시작한 이유는 KLIPS의 연간근로소득 변수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전년도 일자리 특성, 전년도 개인 특성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려면 7차년도 연간근로소득, 6차년도 개인 특성 변수를 연결해 사용해야 한다.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이므로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으로 분석하였다. 선형확률모형은 이분산이 존재하며, 그 형태가 알려져 있다. 이를 감안해 GLS 방식으로 분산을 추정하였다.

설명변수로는 학력(고졸 미만 기준), 직업훈련, 연령(25~29세 기준), 성별(남성 기준), 가구주 여부, 여성 가구주 여부, 혼인상태(미혼 기준), 근로일수 등을 이용하였다. KLIPS

에서는 한시근로가 10차년도 이전에는 정의되지 않았다. 정의되지 않는 한시근로를 제외한 계약직, 파견, 용역, 가내근로, 특수고용, 시간제를 비정규직 변수로 묶어 설명변수로 통제하였다.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고용보험, 건강보험 직장, 국민연금 모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만)은 비공식 고용변수로 명명하여 설명변수로 통제하였다.

저소득이 일정기간 지속되고, 저소득 탈출 역시 일정기간 이상 지속된 사람들로 분석 대상을 제한하면 더욱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할 경우 분석가능 표본수가 급속히 감소하므로 할 수 없었다.<sup>7)</sup> 또한 분석결과에서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산업대분류, 직업대분류, 사업체 규모가 통제되었다.

<표 9>를 보면 세 가지 모형이 추정되어 있다. (가)와 (다)는 같은 표본에 대해 사업체 특성을 추가한 것(다)과 아닌 것(가)의 차이가 있다. 사업체 특성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결측값으로 인해 표본수 손실이 생긴다. (가)는 (다)와 동일한 표본에 대해 추정한 것이므로 표본수 손실이 발생한 후 추정된 결과이다. (나)는 사업체 특성 변수들에 결측값이 없을 경우 사업체 특성이 통제되지 않은 (가)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추정한 것이다.

먼저, (가)의 결과를 보자. 대졸 이상은 탈출확률이 고졸 미만에 비해 20% 가량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나머지 학력은 고졸 미만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은 최근 직업훈련 경험이 저소득 탈출과 통계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9차의 경우 예상과 달리 계수가 (-)이므로 좀 더 분석이 필요한 듯 보인다. 연령은 60대 이상이 기준인데 젊을수록 60대 이상에 비해 저소득 탈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저소득 탈출 가능성이 낮았다. 가구주, 여성 가구주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혼인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연간근로일수는 길수록 저소득 탈출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가)에 사업체 특성을 추가하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를 통해 살펴 보자. 전문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계수가 상식과 달라 검토가 필요하다. 대졸 이상의 결과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직업훈련은 최근의 직업훈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6차 직업훈련도 유의하지만, 계수 방향이 상식과 다르다. 연령은 60대 이상과 50대는 저소득 탈출에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외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젊을수록 저소득 탈출 가능성이 높았다. 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남성보다 탈출 가능성이 낮았고, 기혼보다는 미혼인 사람의 저소득 탈출 가능성이 높게 나

7) 여기서는 보고하지 않았지만 저소득이 2년간 지속된 사람들에 한해 4년 뒤 상태를 분석해 본 결과 회귀계수의 방향은 이 장의 분석과 다르지 않았지만, 표본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하므로 통계적 유의도는 많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것이 표본수의 한계 때문인지, 원래 그런 것인지는 가용가능한 데이터의 부재로 인해 후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표 9〉 세전 연간근로소득 기준 저임금 탈출(2003→2007년)

	(가)		(나)		(다)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고졸	0.0210	0.68	0.0862	0.00	0.0155	0.69
전문대졸	-0.0079	0.91	0.0698	0.13	-0.1508	0.02
대졸 이상	0.2092	0.00	0.1769	0.00	0.1989	0.01
6차년도 직업훈련 받았음	-0.0667	0.46	-0.1062	0.04	-0.1748	0.05
7차년도 직업훈련 받았음	0.1077	0.35	0.1841	0.00	0.1266	0.18
8차년도 직업훈련 받았음	0.0473	0.47	0.0004	0.99	0.0978	0.15
9차년도 직업훈련 받았음	-0.1309	0.05	0.0823	0.05	0.0364	0.60
10차년도 직업훈련 받았음	0.2606	0.00	0.2083	0.00	0.2166	0.00
30대 미만	0.3233	0.00	0.3052	0.00	0.2886	0.00
30대	0.2843	0.00	0.1894	0.00	0.1446	0.03
40대	0.1724	0.00	0.1883	0.00	0.1218	0.03
50대	0.1076	0.01	0.1058	0.00	0.0557	0.29
여성	-0.3112	0.00	-0.1050	0.08	-0.2063	0.00
가구주	-0.0647	0.31	0.1108	0.07	-0.0294	0.66
여성*가구주	0.0638	0.45	-0.0499	0.49	0.8000	0.43
미혼	0.0448	0.41	0.0241	0.57	0.1076	0.08
이혼/사별	-0.0171	0.76	-0.0397	0.31	0.0329	0.65
연간근로일수	0.0011	0.00	0.0013	0.00	0.0008	0.00
비정규직(2003년)					0.0174	0.59
비정규직(2007년)					-0.1539	0.00
비공식고용(2003년)					0.0046	0.91
비공식고용(2007년)					-0.0839	0.05
자영/고용주(2003년)					0.4059	0.00
자영/고용주(2007년)					-0.0666	0.55
상수항	-0.0245	0.77	-0.3035	0.00	0.0325	0.80
표본수	497		941		497	
$R^2$	0.6663		0.5569		0.8036	
Adj- $R^2$	0.6537		0.5483		0.7718	

타났다. 연간근로일수는 여전히 길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저소득 탈출 가능성을 높였다. 사업체 특성 중 규모, 직종, 산업은 따로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으나, 고용형태는 보고하였다. 이를 보면 자영업 경험을 제외하면 과거의 경험보다는 현재의 고용형태가 저소득 탈출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형태의 영향은 장기적이기보다 단기적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런데 이상의 결과는 겨우 497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얻은 결과이다. 통제하는 변수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분산의 추정에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결측값이 무작위로 발

생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경우 계수 추정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업체 특성 변수들로 인해 결측값이 발생하기 전의 자료를 이용해 사업체 특성의 통제 없이 추정한 (나)의 결과를 이용해 (가)와 비교해 보자. 전체적으로 통계적 유의도가 개선되고, 보다 상식에 가까운 결과로 더 많이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현재의 분석결과는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나), (다)를 통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은 비교적 강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면 학력은 높을수록, 직업훈련을 받을수록 긍정적인 저소득 탈출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적자본의 축적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연령은 젊을수록 유리하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유리하다. 연간근로일수가 길수록 저소득 탈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실업과 비경활에 머무르는 기간이 최대한 짧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사업체 특성을 추가하면 상당한 정도의 설명력 개선이 나타났다.  $R^2$ 를 보면 사업체 특성을 통제하기 전인 (가)의 모형설명력은 66.7%인 한편, 사업체 특성을 통제하면 80.3%로 13.6%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개인의 인적자본축적을 지원하고 실업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의 중요성과 함께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대안도 중요함을 시사한다.

## V. 맺음말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확인된 몇 가지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이 낮을수록 실업과 비경활을 빈번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근로일수가 근로소득 지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근로소득 지위별로 실제 일한 날의 수를 분석할 경우에도 확인되며, 저소득자의 실업 또는 비경활로의 이동 및 실업 및 비경활로부터 저소득으로의 유입을 분석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사실이다.

두번째는 성별, 30대 여부, 대졸 이상 여부 같은 개인의 특성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일자리에서 비정규직 또는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비공식 고용에 있는지 같은 일자리 특성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분석결과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경우 저임금 탈출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했다.

세번째는 개인의 인적자본량 역시 저임금 탈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기존 문헌들은 주로 정규 교육의 영향을 연구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업훈련의 효과도 함께 검증하였는데 정규 교육의 경우 고졸 미만에 비해 대졸 이상일 경우 저소득 탈출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직업훈련은 분석모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차

이가 있기는 하지만 저소득 탈출효과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은 저소득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저임금자일수록 실업에 노출될 가능성이 고임금자에 비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일단 실업상태에 빠진다면 신속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마련이 긴요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취약계층일수록 고용지원서비스 등 관련 정보에의 접근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개인의 인적자본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저소득 탈출에 한계가 존재한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여 공식 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 임금차별 시정 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남용을 줄이며, 산업정책을 통해 성장전망이 좋은 산업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개개인의 인적자본 확충이 동반되어야만 저소득 탈출에 성공할 수 있다. 저소득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직업훈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의 마련이 필요한데, 단기적 효과에 그치는 훈련만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청년층이나 장년 남성계층과는 달리 고령층이나 여성 등 일부 취약계층의 저임금 탈출은 분석결과에서도 보듯이 쉽지 않은 일이다. 이들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체계 확충은 이상의 세 가지 노력과 더불어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는 KLIPS의 표본수 부족으로 인해 보다 엄밀한 저임금(소득)층의 정의, 이에 기반하는 보다 엄밀한 연구결과 도출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일자리의 특성을 보다 엄밀히 다루려면 사업체-개인패널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 시도할 수 없었다. **KL**

#### <참고문헌>

이병희·홍경준·이상은·강병구·윤자영(2010), 『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한국노동연구원.

Andersson, Fredrik, Harry J. Holzer, and Julia I. Lane(2005), *Moving Up or Moving On - Who Advances in the Low-Wage Labor Market?*,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OECD(2010), *OECD Employment Outlook*.